

주간 통일정세

2015-18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친미정책의 결과”(5/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8일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4월27일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지침 재개정을 ‘적극 비호 두둔’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조평통 대변인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국의 침략전쟁 수행 전략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조선반도 유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괴뢰들을 무시하고 남조선에 제멋대로 기여들어 군사작전을 벌리는 것을 핵심조항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고 전함.
 - 이어 조평통 대변인은 박근혜정부가 지침 재개정을 두둔해 ‘사대매국적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나아가 “한·일수교 50년 행사를 크게 조직하겠다고 하면서 백년 숙적 일본반동들에게 더욱 비굴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북대화 가능성 거듭 일축…“뻔뻔스럽다”(5/5, 민주조선, 우리민족끼리)
 - 민주조선은 5일 ‘뻔뻔스러운 대화타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괴뢰패당이 ‘남북관계 해빙기’니, ‘대화준비’니 하고 떠들고 있다”면서 “희떠운 수작질의 철면피성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어 지난달 끝난 연례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거론하며 “동족대결에 이끌리 난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풀릴 수 없고 대화는 절대로 재개될 수 없다”고 못박음.
 - 우리민족끼리도 남측의 대화 목소리와 관련해 한미 군사연습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언급하며 “망동이 계속되는 한 그 어떤 북남관계란 있을 수 없으며 언제 가도 대화마당은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사전접촉 불허 비난…“대결 본색”(5/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4일 단평 ‘명백히 드러났다’에서 남측의 불허 조치에 대해 “실로 온 겨레를 분노케 하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함.
 - 또한 매체는 남한 노동계가 통일축구대회를 제의한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남한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남측이 이에 “찬물을 끼얹고 반통일적이고 대결적인 본색을 더욱 똑똑히 드러냈다”고 비난함.
 - 이어 이번 일을 통해 남한 당국의 대화와 관계개선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면 “통일부를 비롯한 현 괴뢰보수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 사이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으며 북남관계는 더욱 파국상태에 처하게 될 것임을 실증한다”고 주장함.

- 북한, 통일장관 ‘천륜’ 발언 비난…“5·24해제부터”(5/5,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5일 논평 ‘누가 천륜을 어기고 있는가’에서 홍 장관이 최근 남북자가족을 만나 ‘북한이 천륜을 어겼다’고 말한데 대해 “천륜에 대해 말한다면 바로 우리가 괴뢰당국에 해야 할 말”이라고 주장함.
 - 이어 “탈북자들의 절대다수가 자기 의사와 배치되게 괴뢰들에게 납치되어 강제로 남조선에 끌려간 사람들”이라면서 탈북자의 북송과 남측의 사과를 요구함.
 - 또한 논평은 남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이 있다면 한미 군사연습과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북남사이의 일체 접촉과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한인 대학생 주원문씨 송환 요구 일축(5/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6일 논평에서 남측이 주씨의 석방과 송환을 요구한 것은 ‘궤변’이라며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고 가소롭기 그지없는 망동”이라고 비난함.
 - 논평은 “나라를 막론하고 사전통보 없이 자국내로 들어온 사람을 억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문제”라며 “불법입국한 사람을 우리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에 누구도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다”고 못박음.

- 논평은 또 남측이 2011년 2월 조난당한 북한 주민 31명을 50여일간 억류했던 사실 등을 언급하며 “저들이 감행한 추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정정당당한 우리의 자주권 행사에 대해서만 시비하고 걸고들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남측이 주씨의 불법입북 사건을 계기로 “또 하나의 모략적인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일으켜 우리의 영상(이미지)을 흐리게 하고 동적 대결을 심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함.
- 북한 “북방한계선 미국이 설정한 것…목과할 수 없다”(5/1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0일 “북방한계선은 정전 직후 유엔군 사령관이 조선서해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것”이라며 “미국 자신도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함.
 - 이어 남한이 “정전 협정과 국제협약의 요구에도 어긋나며 더우기 북남 사이에 아무런 합의도 거치지 않은 이런 것을 북남 해상분계선인 듯이 강짜를 부린다”면서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가”라고 반문함.
 - 북한은 또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유일한 해상경계선이라고 떠벌이면서 우리 측 영해에 침범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 책동을 ‘정상적 작전활동’으로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추호도 목과할 수 없는 날강도적 꾀변”이라고 혈똥음.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 “남측 북한 영해 침범”…예고없이 조준사격 경고(5/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서남전선군사령부는 8일 ‘비상특별경고’를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침예한 서해 열점수역에서 아군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괴뢰 해군함정들에 대해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5월1일부터 7일까지 매일 2~3차에 걸쳐 17척의 괴뢰 해군 쾌속정들이

우리 측 영해 깊이 침범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앞서 4월26일에도 여러 차례 걸쳐 5척의 괴뢰해군 쾌속정들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설명함.

- 통신은 “해상 침범의 구실은 제3국 어선단속이었으며 숨은 속내는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 고수였다”고 주장함.

■ 북, 동해상으로 KN-01 함대함미사일 3발 발사(5/9, 연합뉴스)

- 함참은 9일 “북한이 오후 4시 25분부터 5시 23분까지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KN-0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함참은 “북한이 지난 2월 6일 동해에서 김정은 참관 하에 발사한 미사일과 동종이며 성능 개량을 병행한 무력시위성 발사로 평가된다”고 설명함.

■ 北 사이버인력 900명 증가…해커 1천700여명 활동(5/10, 연합뉴스)

- 군 당국은 10일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은 해커 1천700여명, 지원조직 5천100여명 등 총 6천800여명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사이버전력을 핵, 미사일과 함께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바람의 방향을 측정하는 풍향계를 서·중부지역에 설치하고 전단 격파용 고사총도 추가 배치한 것으로 군은 파악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개성공단 잔업 거부·태업 움직임…생산차질 우려(5/10, 연합뉴스)

-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장 내에서 북한 근로자들의 잔업 거부와 태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소식통은 “하루 이틀 태업하고 마는 사업장 등 여러 형태가 있다”며 “북측은 계속 기업을 상대로 압박하면서 태업 등으로 생산차질을 겪어 기업의 납품

부분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함.

- 북측은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 임금을 지급했지만 북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5.18%)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 ▲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사인하지 않은 기업 등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를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북측도 4월분 임금에 대해서는 어정쩡하게 넘어가지 않으려는 상황이다. 이번 주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중선양서 5년만에 6·15 공동선언 남북 사전 접촉(5/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민간 차원의 사전 접촉이 5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이뤄졌다고 전함.
 - 뉴스는 ‘광복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남측 대표단 5명을 포함해 남측 관계자 8명은 5일 오후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민간 차원의 문화·학술·체육행사 등 공동행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함.
- **6·15 남북 공동행사 내달 중순 개최 합의(5/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광복 70주년·6·15 공동선언 15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와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는 7일 선양에서 열린 사전접촉에서 6·15 남북 공동행사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고 보도함.

- 검찰의 ‘성완중 사건’ 수사를 ‘청와대의 꼭두가시가 되어 왕청같은(*차이가 엄청나다) 데로 끌고 가는 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비난(5.4, 중앙방송·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북핵위협’ 발언에 대해 ‘사드의 남조선 배비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괴뢰들이 제아무리 북핵위협을 고아대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자·호전광으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가릴 수 없다’고 비난(5.6,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의 '北인권법' 추진에 대해 '제도통일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흥계의 산물'이라며 '가뜩이나 암담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더욱 깊숙이 몰아넣는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비난(5.6, 중앙통신·민주조선)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5.7), 경찰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시위대 진압 및 부상자 발생 관련 남한은 "최악의 인권불모지, 암흑사회"라고 비난하며 '反정부 투쟁' 선동(5.7, 중앙방송·중앙통신)
- 現 남북관계는 '남한의 반민족적 망동의 필연적 후과'라고 책임 전가 및 최근 남한 당국의 남북대화 언급 또한 "북남관계 파탄책임 모면과 대결정책 합리화 술책"이라고 왜곡주장(5.7, 중앙통신·노동신문)
- 【「직총」 중앙위 대변인 담화(5.8)】 서울에서 5·1절에 진행된 집회들 관련 '방대한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탄압하고 강제 연행해 가는 강패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최악의 인권불모지, 암흑사회'라고 비난 및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성원한다'고 강조(5.8, 중앙통신·중앙방송)
- 통일부의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 발표(5.1)를 "노숙, 불순한 속심"으로 왜곡 및 '북침전쟁 책동과 反北 모략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형편에서 대화와 관계개선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5.10, 중앙통신·노동신문)
- 韓美 '북한인권토론회(4.30, 뉴욕)' 등 행사 및 외교부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6월중 서울 개소 계획을 비난하며 "괴뢰당국이 인권모략으로 우리(北) 체제를 헐뜯으면서 우리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속 강조(5.10,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인공위성 발사는 자주권...걸고들지 말라"(5/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화적 위성을 필요한 시기에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발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변의 입장"이라고 선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이 "우리가 진행하는 우주과학 연구와 실용위성 제작, 그 발사와 관제는 철두철미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걸고 드는 것 자체가 자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함.
 - 또한 대변인은 "저들이 싸올리는 위성은 합법적이고 우리가 진행하는 위성발사는 불법이라는 것은 날강도적 주장"이라며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존엄 높은 지위는 미국을 비롯한 온갖 불순적대세력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일본 ‘납북자 외교’ 비난…재조사 중단 시사(5/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논평에서 ‘정치시녀의 추악한 몰골’에서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일본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에 대해 “대조선 적대의식이 골수에 찬 대결광신자”, “초보적인 정치지식도 갖추지 못한 미숙아”라고 맹비난함.
 - 통신은 야마타니 납치문제담당상이 미국에서 ‘반공화국 인권토론회’를 열고 각국 유엔 대표들에게 납치문제 해결에 도움을 청하는 외교를 하려고 한다면서 “국제 무대에서 납치소동을 일으키려는데 대해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경고함.
 - 이어 통신은 일본 각료가 납치문제를 북일 양국간에 해결하기로 한 합의를 어긴 것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없이 “자기의 생존수단을 부지하고 정치적 인기를 올리려는 치졸한 기만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북한, 미국의 대북인권 제재 추진 비난…“망상”(5/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벗어던진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면사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 국무부의 새 인권제재 검토 발표에 대해 ‘대북 인권책동’이 “노골적인 폭력양상으로 극도의 무분별 속에 감행되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인권문제로 안팎에서 비난을 받는 미국이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말이안 된다면서 미국의 주장은 “한낮의 개꿈과도 같은 망상”이라고 비난함.
 - 또한 통신은 “어떤 제제나 봉쇄도 스스로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사랑하고 빛내어 가는 우리 인민을 놀래울 수 없고 우리 제도를 허물 수 없다”면서 미국에 “상대를 오관하지 말라”고 경고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미국 NGO, 북한에 30만달러 상당 묘목용 씨앗 지원(5/6, 미국의소리)
 -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인 ‘원그린코리아무브먼트’(OGKM)가 북한에 30만 달러 상당의 묘목용 씨앗을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전함.
 - 방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산림복구전투’를 벌이고 있는 북한이 이 단체에 사업을 위한 평양 상설사무국의 설치, 교통·통신 시설 이용과 자유로운 출입국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이 단체에 산림녹화와 도시녹화를 위한 65억 그루 나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지원을 위임했다고 설명함.
- 北 고위당국자 “미국이 강요할 때 핵미사일 쓸 수 있다”(5/7, CNN)
 - 박영철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은 7일 방송된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핵을 보유했다”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했느냐는 물음에 “물론이다”고 주장함.
 - 이어 매체는 ‘북한이 그 무기(장거리 핵미사일)를 사용할 것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미국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걸 강요할 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일본, 북한 핵·미사일 구실로 군사대국화 기도”(5/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정세론 해설’ 기사에서 “일본은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일본의 자위대 무력 강화와 핵 무장화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무시할 수 없는 위험한 전쟁 세력이며, 일본의 무분별한 군사대국화 책동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화근”이라고 우려함.

사. 대러시아

- 북한, 러시아에 도서 기증…북러 협력관계 ‘이상무’(5/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아무르 국립인문사범대학에서 하바롭스크 주재 북한 부총영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노작 등 북한 도서 기증식이 열렸다고 6일 보도함.
 - 통신은 아무르 국립대 측은 앞으로 북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홍보센터도 만들 것이며, 북한 주요 대학들과의 교류·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전함.
- 주북 러시아 대사, 리을설 인민군 원수 등에 훈장(5/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6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북한군 참전 용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캐나다 정보당국 “북한 핵활동 안보에 중대 위협”(5/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나다 국가정보기관인 보안정보국은 지난 6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떨지 않은 미래에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재개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많은 관측통들이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음을 8일 보도함.
 - 보안정보국은 이어 “북한이 북미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면서 “호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고 방송은 전함.

- 日 납치문제 담당상(야마타니)의 유엔 등 상대로 ‘납치문제 해결 외교활동’에 대해 ‘납치문제의 北-日間 해결 합의를 어긴 신뢰를 저버린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모든 조일합의가 하늘로 날아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위협(5.4, 중앙통신)
- 몽골 인민혁명당 대표단(단장: 즈.바트바야르 대외관계담당 비서), 5월 4일 평양 도착(5.4,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조선인인학협회 대표단(단장: 강경부 회장), 5월 4일 제17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론회 참가 위해 평양 도착(5.4, 중앙방송·중앙통신)
- 재일본 조선청년동맹일꾼 대표단(단장: 배준렬 부위원장), 5월 4일 평양 출발(5.4, 중앙방송·중앙통신)
- 북핵위협 발언들 관련 ‘THAAD’ 배치와 한·미·일 3각 공조 구축 및 6자 회담 재개 명분을 세워보려는 망상이 깔려 있다’며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계속 입방아질을 해대며 분별없이 날뛰면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5.5, 평양방송)
- 북핵문제 관련 ‘바스위스’(전 미국무성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미국과 北사이에는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을 거론 ‘이것은 오바마행정부에 주는 적절한 충고’라며 ‘조선반도 핵문제를 산생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기본 장본인인 미국이 이제라도 자기 할 바를 찾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5.5,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베트남친선협회대표단(단장: 서호원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5월5일 ‘남베트남해방 및 통일’ 40돌 기념행사 참가 후 귀환(5.5, 중앙통신·중앙방송)
- ‘韓美 연합사단’ 5월 공식출범 관련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흥계가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그 선제타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리(北)의 노력도 백방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5.6, 중앙통신·노동신문)

- 韓美 원자력협정 가서명(4.22)에 대해 “미국이 괴뢰들에게 핵무장화의 길을 열어준 범죄적 망동으로 핵전파의 장본인, 조선반도 핵위기 주범”이라고 비난 및 ‘핵무기 강화’ 역설(5.7, 중앙방송)
- 최근 韓美日의 미국 현지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4.26-5.2) 및 ‘북한인권문제’ 청문회·토론회 개최 발언에 대해 ‘승산도 없는 어리석은 놀음을 끈질기게 벌려놓는 자들’이라며 이는 “우리(北)의 강경대응 의지만 강화해주게 될 것”이라고 반발(5.7, 중앙통신)
- 재일본조선인인학협회 대표단·재미동포의학자 대표단(제17차 평양의학과학도론회참가), 5월 7일 평양 출발(5.7,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태국, 各各 외교관계 설정 40돌 기념 공동우표 발행(5.8, 중앙통신)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룡성기계 산하공장 시찰…군수공장인듯(5/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함경남도 룡성기계연합기업소내 ‘2월11일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장의 가공·조립시설 등을 둘러보고 “최근 우리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이 크게 도약했다”며 “공장 노동계급이 선진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어 “공장 안에 차넘치는 1950년대 군자리 노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더욱 세차게 폭발시킨다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은 원산 별장 인근 경비행기 활주로 완공”(5/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강원도 원산 해안가 별장 인근에 경비행기 전용 활주로를 최근 완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방송은 구글어스가 지난 3월26일 촬영한 강원도 원산 해안의 위성사진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용 별장 인근에 기존의 전용 기차역과 나란히 길이 550m, 폭 15m 규모로 북서 방향으로 뻗은 새 활주로는 들어선 것이 보인다고 보도함.

- 북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5/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완성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직접 시험발사 명령을 하달하자 “잠수함이 바닷속 탄도탄 발사 심도까지 신속히 침하했다”면서 “잠시후 바다 면을 뚫고 솟구친 탄도탄이 창공 높이 날아올랐다”고 묘사함.
 - 이어 “시험 발사를 통해 함내 소음준위, 발사반 충격, 탄도탄의 수면출수속도, 자세각 등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 수중발사가 최신 군사과학기술적 요구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점이 검증확인됐다”고 강조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우리 식의 공격형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것에 못지않은 경이적인 성과”라며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함.
 - 그는 또 “전략잠수함 탄도탄이 생산에 들어가고 가까운 시일에 실전배치되면 적대세력들의 뒷잔등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을 매달아 놓는 것으로 된다”며 “마음먹은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김영남, 러시아 전승절 행사 참석 위해 출발(5/8,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8일 오후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전국상업부문 일꾼회의…“소비재공급 개선하라”(5/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6일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안정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상업부문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상업부문 일꾼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함.

- 방송은 김정은 체제 들어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전국 상업부문 일꾼들을 소집해 주민들에게 소비품과 생필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함.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 카타르 건설회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5/7,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카타르 건설회사 CDC와 카타르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 간 회의록을 입수해 CDC가 고용 중인 북한 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7일 보도함.
 - 방송은 CDC가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점을 해고 사유로 들었다고 전함.
- 스위스, 북한에 64억원 상당 분유 지원(5/7, 미국의소리)
 -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처(SDC)의 토마스 피슬러 평양사무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에 분유 1천50t을 지원했다고 밝힘.

- 미국-북한 3월 교역액 급감…전액 인도적 지원품(5/7, 미국의소리)
 -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의하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미국의 대북 수출은 7천달러, 대북 수입은 전혀 없어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7천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3월 미국의 대북 수출 7천달러도 항목을 들여다보면 모두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방송은 전함.

- 올들어 중국 방문 북한 주민 크게 감소(5/7, 미국의소리)
 -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의하면, 중국 국가여유국은 최근 발표한 '외국인 방문객 통계자료'에서 지난 1~3월 합법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3만8천900명으로 작년 동기의 4만3천200명에 비해 약 10% 감소했다고 밝힘.
 - 방문 목적별로는 '취업'이 2만 명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밖에 '회의 참석'이나 '사업'이 6천200명, '관광'은 200명 수준이었다고 방송은 전함.

- 세계식량계획, 북한 주민 80만명에 영양 지원(5/8, 미국의소리)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달 어린이와 임산부 등 북한주민 80만 3천명에게 1천738t의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지난달 WFP의 대북 영양지원은 1월의 1731t, 2월 1187t, 3월 1651t보다 늘어 올해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지난해 같은 달의 20405t보다는 줄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유엔 '무두봉호' 동결에 강력 반발(5/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6일 “무두봉호를 제멋대로 제재에 걸어 강제로 동결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국제법 위반은 물론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비난함.
 - 무두봉해운사 사장은 무두봉호가 유엔이 제재대상으로 삼은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와 다른 독자적 법인으로 “한 번도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그 어떤 금지품을 취급한 적이 없는 평화적인 민간무역선박”으로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선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비인도주의적 인권 유린행위”라면서 “무두봉해운사뿐 아니라 멕시코에도 많은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주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박봉주(내각총리)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개건정형 현지요해(5.3, 중앙통신)
- 제11차 전국기계설계축전 개막식(공장 등 110여개 단위 참가, 설계지원 프로그램 등 500여건 전시), 5월 4일 중앙경공업제품 건본관에서 진행 및 리중국(기계공업상) 등 참가(5.4, 중앙방송)
- 조선교육후원기금('05.1, 창설)의 '교육후원활동과 국제기구·해외동포들과 긴밀한 협조' 및 "사회주의교육제도 우월성" 선전(5.4, 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1991.5.5) 발표 24돌 즈음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원천'이라며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에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온 세상에 힘있게 펼쳐 나가자'고 주장(5.5,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 현지지도(5.9, 중앙통신·중앙방송)
- 유주영(北赤 중앙위 부서기장),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5.8)'을 맞아 '2014년에 재난관리·사회의료봉사·물위생분야에서 조선적십자회의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선전(5.8, 중앙통신)
- '김정일의 선군의 기치는 곧 우리(北)의 자주, 우리의 존엄이었고 반제투쟁의 승리를 위한 만능의 무기였다'며 '우리는 주변관계 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제국주의가 반사회주의 책동을 계속 벌리는 한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5.9,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580군부대 산하 7월18일 소목장과 안변양어장 현지지도(5.11, 중앙방송·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전국상업부문 일꾼회의…“소비재공급 개선하라”(5/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6일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안정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상업부문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상업부문 일꾼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함.
 - 방송은 김정은 체제 들어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전국 상업부문 일꾼들을 소집해 주민들에게 소비품과 생필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함.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 카타르 건설회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5/7,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카타르 건설회사 CDC와 카타르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 간 회의록을 입수해 CDC가 고용 중인 북한 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7일 보도함.
 - 방송은 CDC가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점을 해고 사유로 들었다고 전함.

- 스위스, 북한에 64억원 상당 분유 지원(5/7, 미국의소리)
 -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 개발협력처(SDC)의 토마스 피슬러 평양사무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에 분유 1천50t을 지원했다고 밝힘.

- 미국-북한 3월 교역액 급감...전액 인도적 지원품(5/7, 미국의소리)
 -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의하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 미국의 대북 수출은 7천달러, 대북 수입은 전혀 없어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7천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3월 미국의 대북 수출 7천달러도 항목을 들여다보면 모두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방송은 전함.

- 올들어 중국 방문 북한 주민 크게 감소(5/7, 미국의소리)
 -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의하면, 중국 국가여유국은 최근 발표한 '외국인 방문객 통계자료'에서 지난 1~3월 합법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3만8천900명으로 작년 동기의 4만3천200명에 비해 약 10% 감소했다고 밝힘.
 - 방문 목적별로는 '취업'이 2만 명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밖에 '회의 참석'이나 '사업'이 6천200명, '관광'은 200명 수준이었다고 방송은 전함.

- 세계식량계획, 북한 주민 80만명에 영양 지원(5/8, 미국의소리)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달 어린이와 임산부 등 북한주민 80만 3천명에게 1천738t의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지난달 WFP의 대북 영양지원은 1월의 1731t, 2월 1187t, 3월 1651t보다 늘어 올해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지난해 같은 달의 20405t보다는 줄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유엔 '무두봉호' 동결에 강력 반발(5/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6일 "무두봉호를 제멋대로 제재에 걸어 강제로 동결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국제법 위반은 물론 우리

-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비난함.
- 무두봉해운사 사장은 무두봉호가 유엔이 제재대상으로 삼은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와 다른 독자적 법인으로 “한 번도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그 어떤 금지품을 취급한 적이 없는 평화적인 민간무역선박”으로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선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비인도주의적 인권 유린행위”라면서 “무두봉해운사뿐 아니라 멕시코에도 많은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주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경공업부문에서 ‘건강보호·질병치료·생활상평의보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제품들(식료공업분야:체력활성음료 등) 개발생산’ 선전(5.4, 중앙통신)
- 평양시 등 전국 도시·군들의 산림조성·산림보호 사업(병충해 예방 및 산불감시, 땀감문제 해결 등) 전개(5.4, 중앙통신)
- 北, 자체의 기술로 고층기상관측체계를 개발하였다고 선전(5.5, 중앙통신)
- 北, ‘어선용 위성수신체계 도입’ 등 수산업의 정보화·현대화에 큰 힘을 넣고 있다고 선전(5.6, 중앙통신)
- ‘중공업부문 4월 인민경제계획 초과 수행(△기계공업성 산하 공장 140.5%, △전기기계공업부문 113%, △운전기계공업부문 153.5%)’ 선전(5.7, 중앙통신)
- 北, 4월과 5월 약초재배월간사업이 각지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도
-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자들의 4월 한 달 동안 “2천4백40여 정보 인공풀판에 먹이 풀씨 파종’ 등 성과 보도(5.10,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평양과기대, 여학생 처음 입학…남미유학생 배출(5/4, 미국의소리)
 -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은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당국이 학교 측 요청을 받아들여 150명의 신입생 중 10명을 여학생으로 받았다”고 밝힘.
 - 방송은 평양과기대에 여학생이 입학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학생 10명 모두 북한의 영재학교인 ‘제1고등중학교’ 졸업생이라고 전함.
- 북한,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300개국 참가(5/4, 조선중앙통신)
 - 제18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오는 11~14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함.

- ‘국제조산원의 날’에 즈음한 행사, 5월5일 평양산원에서 진행(5.5, 중앙통신)
-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2차 경기, 5.2~5.22 평양에서 진행(5.5, 중앙통신)
- 제17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가자들, 5월5일 만수대창작사 김일성父子 동상 참배 및 헌화(5.5, 중앙통신)
- 전국상업부문 일꾼대회, 5월 6일 안정수(당중앙위 부장)·김경남(상업상/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진행(5.6, 중앙통신)
- 제17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 5월 5일과 6일 김형훈(조선의학협회 위원장/개회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5.6,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박건의 학생, ‘제20차 톨리아치 국제청소년피아노 연주가 콩쿠르’(러시아 사마라주)에서 1위 수상(5.6, 중앙통신·중앙방송)

- '2015년 봄철 장애인 및 애호가 탁구경기', 5월 5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5.9, 중앙통신)
- 제11차 전국기계설계축전 진행(5.4-10, 평양) 및 '기계제품설계·설계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자료, 기계설계지원 프로그램 전시 발표'(5.10,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 5월 9일·10일 평양 도착 및 최용해(黨 비서) 등 평양역 환영(5.10, 중앙방송)
- 강영미 선수(여자 기계체조), 5월 9일 '2015 국제체조연맹 월드 챌린지컵(불가리아) 이단평행봉' 금메달 쟁취(5.10,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황준국 한반도본부장, “北과의 탐색적 대화에 조건 없다”(5/6, 연합뉴스)
 -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 측과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北京)을 방문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이번 접촉에서도 ‘탐색적 대화’, 즉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당사국 사이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6자 회담 재개 조건을 북한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주요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
 - 황 본부장은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비핵화 대화에 어떻게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깊이 있게 협의하려 한다”고 말함.
 - 황 본부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6자 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에 긴밀한 협의 끝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탐색적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건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하여, 이번 만남에서 5자 간에 형성된 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북한이 조속히 ‘탐색적 대화’에 응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행동해 줄 것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무부, “한미 6자회담 대표, 北비핵화 중요성 재확인”(5/6, 연합뉴스)
 - 제프 래스키 국무부 부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의 전날 회동을 언급하면서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함.
 - 래스키 부대변인 대행은 “황 본부장의 이번 미국 방문은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북한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진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한편, 아베 총리의 美의회 연설에 대한 박대통령의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미일동맹 재확인 등을 거론하면서 “아베

총리의 매우 성공적인 방미 기간에 미일 양국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답변하고, “화해에 관한 건설적인 메시지를 평가한다”고 언급함.

- 이는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여러 성과를 긍정평가하는 동시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비판 여론을 의식, 아베 총리가 하버드대 강연 및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노담화·무라야마 담화 계승 의지를 밝힌 것을 평가하고 주목한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으로 보임.

나. 미·북 관계

- 미 전문가, “김정은, 국내 불안해 러시아 방문 안하는 것”(5/6, 연합뉴스)
 -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미국 싱크탱크 신안보센터의 잭슨 연구원은 5일(현지시간)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애초부터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하고, 그는 “김 위원장은 현재 내부를 장악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만약 기반이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장성택 등) 고위 관리들을 처형할 필요가 없는데 김 위원장은 처형을 했다”고 언급함.
 - 잭슨 연구원은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보다 덜 안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핵개발이 협상카드라는 아이디어는 더는 믿을만하지 않다”며 ‘실질적 위협’이라고 간주하면서 “우리가 현재 중동에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북한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는 “북한정권 교체, 북한 핵·미사일 동결, 방어시스템 강화 및 최적화 등 3개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이중 정권교체는 아주 위험하며, 우선적 고려사항에 포함돼 있지도 않다”고 단언하고, “현재 미사일방어시스템은 세 번째 옵션인 방어시스템 강화 대책의 일환”이라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비롯한 미사일방어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함.

다. 중·북 관계

- 중국, “김정은 러시아 방문 취소는 개인사정 때문”(5/4,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러시아 방문을 취소한 데 대해 “(북한의) 국정과 지도자 자신의 외국방문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김 제1위원장의 방러 불발 이유를 북중 관계와 연관지어 보는 시각에 ‘중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완곡하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됨.
 - 한편, 베이징의 한 관측통은 “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가지 않음에 따라 중국의 승전 기념행사가 열리는 9월 3일이나 그 이전에 방중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며 “만약 그가 실제로 방중한다면 사전에 북중 고위급 교류 동향이 먼저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 北주재 중국대사, ‘구동존이’ 발언 의미 뭉개(5/8, 연합뉴스)
 - 중국 신화통신은 신임 주북 중국대사가 북한의 주요 당국자들과 접촉하면서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 ‘운명공동체’ 등의 표현을 잇달아 사용해 주목을 끌고 있다고 보도함.
 - 신화통신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리 대사는 지난 3월 평양에 부임한 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측 고위인사들과 접촉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흔들림 없는 방침’, ‘전통우호’라는 표현을 최소한 4차례 이상 사용하였고, 북중 관계는 현재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했다는 표현과 북중은 ‘구동존이’가 필요하다는 표현도 각각 두 차례씩 입에 올림. 이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양측 간에 형성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웠던 표현들임.
 - 신화통신은 신임 대사들은 통상 자국의 최신 대외정책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리 대사의 이런 발언은 의미심장하다며 그 속에 내포된 ‘속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함 : (1) ‘역사적인 기회’라는 표현과 관련, “이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은 ‘중조(중북)협’을 포함한다”는 점을 뜻한다고 분석, (2) ‘전통우호’라는 반복적 표현은 “비록 밖에서는 온갖 풍문들이 나돌지만 중국은 중조의 전통적인 우의를 잊지 않을 것이고 시종일관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 (3) ‘구동존이’에 대해서는 “양국 사이에는 북핵문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고 회피할 수 없다. 한 가정에서도 형제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양측이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실속 있는 방법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주장, (4) ‘운명공동체’라는 표현의 경우 “양국은 서로 ‘대문’을 마주하고 있고, 역사와 현실은 모두 우리가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해석함.

- 통신은 리 대사의 이같은 표현들에 대해 사실상 관계개선 쪽에 방점을 찍었지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사뭇 다른 해석도 제기되는데, 중국에서 ‘구동존이’는 통상적으로 미국을 비롯해 체제와 가치관이 확연히 다른 서방국가와 관계개선을 추진할 때 자주 사용돼 온 표현이어서 중국이 같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리 대사의 ‘구동존이’ 등의 표현은 오히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이제는 전통적 혈맹 관계보다는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음.

■ 중국 랴오닝성 관광 당국, “선양-평양 기차여행 상품 출시”(5/8, 연합뉴스)

-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관광 당국은 선양과 북한을 오가는 기차 여행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선양철도 국제여행사가 나흘 일정으로 운영하는 이번 기차 여행은 오는 26일 시작될 예정임.
- 기차는 항구도시 단둥을 거쳐 평양에 도착하며, 승객들은 개성과 묘향산, 관문점 등 북한의 주요 유명 장소를 방문할 수 있고, 이 관광 상품 가격은 2천~3천위안(한화 약 35~52만원)으로 양각도 호텔 숙박비를 포함한다고 이 여행사는 전함.

라. 일·북 관계

■ 일본 집권당 대북제재 강화 검토…납치문제 해결 압박(5/7, 연합뉴스)

-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한 북일 합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본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검토하는 등 일본이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NHK는 전함.
- 대책본부는 납치문제 재조사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작업반을 구성해 해제한 대북 제재를 다시 가하거나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마. 러·북 관계

- 김영남 상임위원장, 러시아 전승절 참석 공식 발표(5/4, 연합뉴스)
 - 북한은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에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함.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불참이 양국 경제협력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외적으로 이같은 움직임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불참으로 인한 양국간의 양금은 여전히 침잠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최고지도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을 일방적으로,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한데 대한 불쾌감이 남아있을 수 있는 한편, 푸틴 대통령의 외교담당 보좌관(외교 수석)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이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했던 만큼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임.
 - 이번 행사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등 서방 정상들이 대부분 불참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을 띄워 ‘홍행몰이’를 노렸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기 때문인데, 북한과 달리 러시아 언론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불참을 노골적으로 비판한데서도 잘 드러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동병상련 속에서 북한은 중국의 공백을 대신해줄 러시아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동진정책에 협력해줄 북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국관계는 장기적으로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 美보고서 주목(5/4, 연합뉴스)
 - 미국의 대표적인 핵군축통인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회장이 지난주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을 시도하는 정황이나 근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핵무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데 있는 한편, 그간 한국 핵무장론은 허황된 주장으로만 간주되었던 가운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분석·연구한 자료를 내놓아 눈길을 끄.
 - 이 같은 주장은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론상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나, 미·중의 ‘방치’ 속에서 북핵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미국의 재정압박과 그에 따른 국방예산 감축이 변수로 작용해 지금까지 한국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국의 ‘핵우산’도 완벽하게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며, 여기에 이웃 일본의 핵무장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국 핵무장 촉발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함.
 - 보고서는 워싱턴 외교가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국으로서도 불가피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단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면 단기간 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음.
 - ‘퍼거슨 보고서’의 지적대로 한국이 핵무장의 길에 나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한결같은 지적인데, 이는 한국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위치에 서있기 때문이며,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요인의 하나인 일본의 핵무장은 동맹인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임.
- 외교통일위원회, “외교 전략 부재” 질타…장관사퇴 요구도(5/4,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의 여야 의원들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이후 양국 간

‘신(新)밀월 시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소외된 게 아니냐며 외교 당국의 전략 부재를 성토했고, 특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빠진 아베 총리의 美의회 연설이나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등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데 대해 우리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추궁함.

- 일부 의원들은 윤병세 장관의 전략 부재를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독도,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어느 것 하나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고, 진전도 없었다”고 질타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전 세계 수상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해 많은 양자회담을 할 수 있는 반동회의에 최소한 총리가 참석하든가 외교장관이라도 갔어야 했는데 교육부총리가 가니까 전략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함.
-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미국에서는 한국 측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사전협의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미·일 양국과의 적극적 교섭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해명하고, “외교부는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을 포함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진전시키고 선순환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임.

■ 한국, 핵잠수함 3척 건조 희망(5/8, 연합뉴스)

- 한국이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핵연료 재활용의 길이 열리면서 핵잠수함 3척의 건조를 희망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한국은 작년 수직발사대에서 잠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천t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하는 장보고-III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이중 6척은 재래식으로 결정했으나 나머지 3척은 아직 동력원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런 관측은 한국이 지난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20%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 일각에서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가 나오는 가운데 제기된 것인데, 한국 전문가들은 사용 후 핵연료의 20% 재활용량은 핵무기 제조에 충분하지 않아 그 의혹을 피해나갈 수 있지만 핵잠수함의 동력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관측해옴.
- 하지만,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예상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핵발전소를 건설·운용한 과학기술이 있지만 핵원료를 핵잠수함 동력원으로 사용할 만큼의 농축 기술이 없는데다 선진국이 이 농축 기술을 전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자체 개발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는 것임.

- 핵 잠수함 건조를 요구하는 소리는 먼저 국민 여론에서 나오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건조에 나선다면 핵비확산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RFA는 내다봄.

■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미동맹 최상…한치의 빛 새 틈도 없다”(5/8,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한미동맹이 최상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빠르게 격변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새로운 한국, 새로운 아태지역,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함.
- 윤 장관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신 밀월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한미동맹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됨.

■ 미국 국방위, “사드 배치는 한미양국에 상호이익”(5/9, 연합뉴스)

-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는 최근 국방수권법안(H.R 1735)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한·미 양국에 상호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배치를 공식 결정하면 이를 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이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하는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됨.
- 국방위는 “우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 사이에 논의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양국에 상호이익이 된다”고 평가하고, 특히 커티스 스키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의회에서 “다층적이고 상호운용적인 탄도미사일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시스템이 배치되면 탐지능력이 커지고 위협을 더욱 잘 인지하며 미사일 방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함.

- 국방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어떤 결정도 한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만일 배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양국의 집단 안보공약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함.

나. 한·중 관계

- “중국 AIB 지분을 36.86% 전망…한국은 3위 차지”(5/5, 연합뉴스)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이 36.86%라는 압도적인 지분율을 차지하고 한국은 전체 3위 지분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은 4일 “역내·역외국 지분율 비율이 75%대 25%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2013년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57개 예정 창립회원국 지분율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보도했으며, 또 인도가 7.48%의 지분율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한국에 이어 독일,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4~7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 이 신문은 “지난 3월 진행한 지분율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중국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은 39.29%에서 (2.43%포인트) 감소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예정 창립회원국이 그 사이 37개에서 57개로 늘었기 때문임.
- 2년째 對중국 수출 부진…“한국경제 회복에 걸림돌”(5/6, 연합뉴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과 회복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흑자 대비 대중 무역 흑자액은 2012년 189%를 정점으로 하락해 지난 1분기에는 지난 15년간 가장 낮은 53%대까지 떨어짐.
 - 국제금융센터는 ‘대(對)중국 수출 부진의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8.2% 감소해 중국과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각 4.7%,

- 2.9%)을 큰 폭으로 밀돌았다며 “이는 과거와 다른 모습”이라고 진단함.
-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그 비중도 2013년 9.4%에서 올해 1분기 10.4%로 상승했지만, 특정품목(식품, 화장품, 자동차 등)을 빼고는 마이너스 상황이라고 국제금융센터는 분석하고,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중국의 수요 둔화, 가공무역 중심의 구조적 취약성, 중국 제품의 경쟁력 향상이 원인”이라고 봄.
- **한중 “北, 조속히 비핵화 초기 조치해야” 의견 일치(5/7, 연합뉴스)**
 -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날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결과를 “북한이 비핵화 초기조치를 하루속히 취해야 한다는 데 한국과 중국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이 같이 설명함.
 - 황 본부장은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초기 조치로 핵활동 중단, 국제원자력 기구(IAEA) 사찰대원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을 거론하면서 “한중 양국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말하고, “한중 양측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수개월간(북한을 제외한) 5자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추진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고 덧붙임.
 -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날로 악화되는 북한 핵 상황의 시급성과 심각성에 대해 미중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대화와 협상의 문을 빨리 열어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단기 목표”라고 말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함.
- **‘불붙는 한·중·일 ‘두뇌전쟁’...“워싱턴의 생각을 잡아라”(5/10, 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을 무대로 한·중·일 3국 사이에 고도의 ‘두뇌싸움’이 불붙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정책입안과 여론형성에 영향을 끼치려는 ‘싱크탱크 전쟁’이 점화된 것이며, 가장 주목되는 신호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싱크탱크 중·미관계연구소(ICAS)가 워싱턴에 첫발을 내디딘 것임.
 - 이 연구소의 설립은 지난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싱크탱크를 설립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며, 연구소 활동의 주된 목적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미국내 논의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려는데 있다고 함.

- 일본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워싱턴 싱크탱크계의 최대 ‘돈줄’로 통하는 사사카와 평화재단을 앞세워 미국 여론주도층을 집중공략하고 있으며, 과거사 이슈와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세미나와 강연, 저술을 통한 직접적 활동에 나서고 있고,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와 주요 대학을 상대로 막대한 자금을 투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함.
- 한국은 ‘양’이나 ‘질’에서 아직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워싱턴의 여론주도층을 겨냥한 공공외교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특히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국제교류재단(KF)은 금명간 미국 굴지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에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며, 투입자금은 총 300만 달러로, 현대자동차그룹이 200만 달러,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00만 달러를 ‘매칭펀드’ 방식으로 출연할 것으로 알려짐.
- 문제는 이웃 일본에 비해 투자가 너무 저조하다는 점인데, 워싱턴의 여론이 한국과 한반도, 동아시아 문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감안해볼 때 한국 정부와 민간이 대미 공공외교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다. 한·일 관계

- 일본 언론, “박대통령, 한일역사문제 분리대응 첫 표명”(5/4,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관계 언급과 관련, 일부 일본 언론은 박 대통령이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인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에 주목했는데, 교도통신은 “일본이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박 대통령은) 역사와 그 이외의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표명했다”고 평가함.
 - 통신은 이어 “한국에서는 최근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외교 당국은 역사와 다른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two track)’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박 대통령이 군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로 삼는 방침을 변경할지 분명치 않다고 전망한 뒤 “역사 문제에서 아베 총리의 양보를 얻지 못한다면 정상회담을 받아들일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적음.

- NHK는 박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난달 29일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사실을 부각시켰는데, “박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추진할 생각을 보였지만 아베 총리의 연설을 직접 비판한 만큼 향후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도함.

■ ‘위안부 최초 보도’ 전 일본기자, “위안부문제 역사적 진실”(5/5, 연합뉴스)

- 1990년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최초로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朝日) 신문기자는 4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밝히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앞서 그는 강연에서 “군 위안부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맞서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나와 내 보도에 대한 공격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위안부 문제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날 강연 뒤 연합뉴스와 만나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답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미국 방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지 않은데 대해 “잘못됐다”면서 “전후 70주년을 맞는 오는 8월 담화에서는 아베 총리가 반드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함.
-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피해자 조사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아사히신문 1991년 8월 11일 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97년 작고)씨의 증언을 최초로 보도했으며, 사흘 후인 8월 14일에는 김씨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를 진술,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함.

■ 유엔대사, 아베 총리처럼 사죄 없이 ‘깊은 후회’…獨대사 “용서 구한다”(5/6, 연합뉴스)

-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행사에서 가해국인 일본과 독일이 대비되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일본이 전쟁 중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에 관해 지난달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연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죄 없이 모호하게 반성의 뜻을 표명한 반면, 하랄트 브라운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나치 독일에 의해 촉발된 전쟁은 이웃국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고 결과적으로 독일의 시민에게도 고통을 줬다고 책임을 거론함.

- 유엔 일본정부대표부에 따르면 요시카와 대사는 “일본이 최근 70년간 전쟁에 대한 깊은 후회(deep remorse)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를 존중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는 영문 메시지를 발표하고,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우리는 거기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요시카와 대사는 사죄하지 않았고 메시지의 상당 부분은 일본이 국제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와 앞으로의 구상에 할애함.
- 하랄트 대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죽음의 행진’을 겪은 생존자가 ‘기억에는 유효기한이 없다’고 한 발언을 인용했으며 “우리 자신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기에 독일은 용서를 구한다”고 거론하고, “국가사회주의 정권의 범죄는 전례 없는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우리는 전율하게 한다”며 유럽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사건에 관해서도 명시적으로 언급함.

■ 일본 정부, 센카쿠 근처 섬에 자위대 새로 배치 검토(5/6,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와 가까운 섬에 자위대 부대를 새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됨.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沖縄)현 미야코지마(宮古島)와 이시가키지마(石垣島)에 유사시 초동대응을 담당할 육상자위대 부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특히 미야코지마에는 함선을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을 갖춘 600명 규모의 경비 부대를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방위성은 규슈(九州) 남쪽에서 대만 동쪽 해상에 걸친 난세이(南西) 지역의 외딴 섬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일대에 육상자위대 부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3년 후에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시에 섬 지역 방어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륙기동단을 신설한다고 NHK는 전함.
- 방위성은 올해 안에 일본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인 요나구니(與那國)에

레이더로 경계·감시를 담당할 연안감시부대를 설치하고, 3년 후에는 가고시마현 오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 유사시 초동대응을 담당할 550명 규모의 경비부대를 배치함.

- 韓日獨 NGO, “징용시설 유산 등재 땀 어두운 역사도 기록해야”(5/8, 연합뉴스)
 - 한국, 일본, 독일의 비정부기구(NGO) 활동가와 학자 등 민간 인사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된 일본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과 관련해 독일인인 마리아 뵈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의장에게 어두웠던 역사도 함께 보존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냄.
 - 이회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서 승 일본 리쓰메이칸대 석좌교수, 한정화 독일 코리아협회 대표 등 ‘야스쿠니반대촛불행동’ 관계자 9명은 이날 오전 독일 외교부를 방문해 뵈머 의장 앞으로 보내는 이런 내용의 서한을 동아시아 담당관에게 전달함.
 - 이들은 전날 ‘야스쿠니반대독일촛불행동’ 주도의 세미나 참석자 50여명의 서명을 결집한 의견서에서 “하시마 탄광, 미쓰비스 조선소, 일본제철 등은 근대 일본이 주변국을 침략해 식민지와 점령지 주민들을 노예적 상태로 만드는 일에 경제 방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전범기업이고, 식민지 조선의 주민 6만여명과 중국인 노동자 등을 강제동원해 노예노동에 가까운 인권 침해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런 사실을 삭제한 채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유산’이란 미명 하에 편법을 사용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은 강제동원·강제노동의 피해자는 물론 유네스코의 창립정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함.
- 일본, 징용탄광 세계유산 추진 한국 비판에 “정치적 주장”(5/8,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탄광 등이 세계유산 등재권고를 받은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발이 정치적 주장이라고 규정는데,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관해 “어디까지나 전문가 기관이 세계문화유산에 어울린다고 인정하고 권고한 것이므로 한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들어올 일이 아니다”고 말함.

- 스가 장관은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1850~1910년 사이 산업혁명으로서 현재 하고 보편적인 가치에 주목해 유산을 추천했고 이에 관해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권고했다”며 이같이 발언했으며, 해당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일본 관계기관이 하나가 돼 한국을 포함한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회원국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얻을 계획이라고 밝힘.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찬성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해당 시설의 세계유산 대상 연도가 "1850년대부터 1910년"이라고 강조,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된 장소라는 한국 측의 주장은 "연대나 역사적 위치, 배경이 다르다"고 반론함.
- 게이단렌 회장 등 일본 경제인 13일 박대통령 예방(5/8,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木+神>原定征)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회장과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한일경제협회 회장이 13~14일 열리는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해 박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등에 관해 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사카키바라 회장은 작년 12월 경제계 인사들과 한국을 방문해 일본 재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박 대통령을 예방하며, 게이단렌 회장이 한국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자리하는 것은 2005년 이후 10년 만임.
 - 일부 日신문, ‘일본군, 위안소 관여’ 빼고 역사학자성명 보도(5/8, 연합뉴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187명이 역사문제를 직시하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향해 발표한 성명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태도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성명의 의미와 맥락을 충실하게 보도한 신문이 있는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극우 세력의 주장에 힘을 신는 듯한 부분을 교묘하게 부각한 매체도 있음.
 -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과 일본 역사에 대해 깊은 생각을 지닌 학자들,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친일(親日) 학자들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소개하고 성명의 전문을 실었으며, 관계자들이 성명 발표에 앞서 수차례 교정작업을 했고 여러 가지 면을 배려해 신중한 단어선택을 했다고 작성 경위를 전함.

- 도쿄신문은 이번 성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언급을 피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사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고 평가했는데, 성명이 ‘수많은 여성이 의사에 반해 구속되고 무서운 폭력을 겪었다는 것이 자료와 증언에서 명확해졌다’고 밝혔으며 특정 용어에 관해 좁은 법률적 논의를 반복하거나 증언에 반론하기 위해 한정적인 자료를 고집하는 것은 ‘잔인한 행위로부터 눈을 돌리고 비인도적 제도를 둘러싼 더 넓은 문맥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전함.
- 반면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후70년 ‘편견 없는 청산’을”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성명 발표 사실을 보도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그녀들에게 있었던 일을 부정하거나 아주 작은 일로 무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의 주장을 전했으나, 성명이 전후 70년에 의미를 부여했고 아베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일본이 타국에 준 고통을 언급한 것을 칭찬했다고 하는 등 일본에 호의적인 내용을 부각하는 데 기사를 꽤 할애함.

라. 한·러 관계

- 동해시, 한·중·일·러 실�크로드 물류연맹 조인(5/6, 연합뉴스)
 - 강원 동해시는 오는 7일 ‘한·중·일·러 동북아 실�크로드 물류연맹 조인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심규언 동해시장 일행이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함.
 - 이번 행사는 한·중·일·러 물류도시 기업과 지방정부 간 공동발전과 호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계획된 것이며, 동해시는 동북아 도시 간 심층적인 물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동참함으로써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 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물류해양거점도시로의 우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7일 진행될 조인식은 중국 헤이룽장성 정부, 러시아 극동지역 정부가 주관·주최하는 것으로 한·중·러 3개국 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한·중·일 다수 물류기업이 참여함.

마. 미·중 관계

- 왕치산 서기, “미국, 중국과 왕래하려면 공산당을 알아야”(5/8, 연합뉴스)
 -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 일원인 왕치산(王岐山) 당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는 방중한 미국 민주·공화당 대표단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은 중국공산당의 지도에 있다”며 “중국과 왕래하려면 중국공산당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은 미국이 인권, 티베트 독립, 홍콩 정치개혁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의 정치·사회체제를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 왕 서기는 “중미 정상은 이미 신형대국관계 건설과 관련해 쌍방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지시했다”며 “양국이 각 영역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이고, 또 “양국 국정은 서로 특징이 있고 상대의 역사를 이해하고 현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며 “중국공산당은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이끌고 있다. 만약 조직이 느슨해지고 기율이 해이해지면 절대로 그런 역사적 중임을 완성할 수 없다”고 말함.
 - 왕 서기는 당이 추진 중인 ‘중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관리)’, ‘당장·당규에 의거한 당관리’ 등을 함께 부각하며 “중국의 반부패는 전 세계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함.

- 美 국무장관, “대만 경제, 중국 의존도 늘었다” 우려(5/8,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최근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대만 경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는데,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언론 보도문을 통해 케리 국무장관이 “대만은 이미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면서 “미국은 대만이 시장 개방을 통해 다원적인 경제무역 환경을 갖춰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함.
 - 또한 케리 국무장관은 대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균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미국은 대만과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그는 대만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을 통해 상호 무역·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미국은 대만이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함.

- 대만은 최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원국 가입을 위해 중국 측과 논의 중임.
- 중국, 인권문제 비판하는 미국 비난(5/8, 연합뉴스)
 - 미국이 중국 당국의 인권변호사 구금을 비판하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에 자국 인권문제 해결이나 신경쓰라면서 “세계의 경찰이나 판사가 되려는 것을 그만두라”고 충고함.
 -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발언 관련 3가지 혐의와 개인정보 불법 취득 혐의로 1년 전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유명 인권변호사 푸즈창(浦志强)의 석방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심장과 너무 긴 팔을 갖고 있다”고 비꼬면서 최근 발생한 볼티모어 폭동사건을 겨냥한 듯 미국은 자국 내부문제 해결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함.
- 美 국방부, “중국, 남중국해 전초기지 확장…영토주장 강화”(5/9, 연합뉴스)
 -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전초기지 부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8일(이하 현지시간) 밝힘.
 -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중국 군사·안보발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해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전초기지들에 구조물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며 “여기에는 항구와 통신·정찰시스템, 병참시설, 그리고 적어도 한 개의 활주로가 포함된다”고 밝혔고, “이 같은 행위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의 영유권에 기여하지 않지만, 중국은 자국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간 또는 군사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함.
 - 보고서는 “중국은 단기적이면서 고강도의 지역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군의 능력을 높이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군사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200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9.5%씩 국방예산을 늘렸으며 가까운 시기에 미국과 필적할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할 재정적 능력과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함.
 -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이 미화 1천36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했으나, 중국 정부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해 정확한 액수와 증가율을

산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고, 러시아는 763억 달러, 일본은 476억 달러, 인도는 382억 달러, 한국은 334억 달러, 대만은 103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함.

- 중국군, “미군의 ‘중군사력 보고서’ 상호신뢰 훼손”(5/9, 연합뉴스)
 - 중국군은 미군이 최근 ‘중국 군사·안보발전’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케케묵은 표현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중국 국방부 정연성(耿雁生)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지키는 행동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것으로 비난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이러쿵저러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함.
 - 정 대변인은 또 미군이 연례적으로 이같은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쌍방의 상호 신뢰를 엄중히 훼손하는 것으로 중미 간 신형대국관계와 신형군사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양국 정상외의 중요한 공동 컨센서스와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함.
- 美국방부, “중국군, 무인기 4만대 넘게 생산 계획”(5/10, 연합뉴스)
 - 중국군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2023년까지 무인기를 4만대 넘게 생산할 계획이라고 미국 온라인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이 매체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현재 무장·비무장 무인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수집과 폭격을 위해 원거리 무인 항공기도 개발 중이라며 이같이 전함.
 - 이 보고서는 “장거리 무인 항공기의 개발은 중국의 장거리 정찰과 타격작전 능력을 증강해 줄 것”이라며 “중국이 2014~2023년 사이 105억 달러(약 11조4천억원)를 들여 4만1천800개 이상의 육상·해상 발진 무인기(드론)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고, 무인기 개발은 지난해 다탄두 미사일과 잠수함·군함 생산을 포함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중국 군사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미 국방부는 분석함.
 - 보고서는 무인기 외에도 중국의 핵무기, 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 우주 전투, 잠수함 능력을 분석하면서 중국군은 그동안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군대였으나 현재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비대칭 전투 능력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복잡하고 고도화된 군대가 됐다고 평가함.

- 중국 당국은 지난해 7월 인공위성을 목표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으며 2013년 실험에서는 미사일이 미국이 정찰과 통신위성을 타격할 만큼 높이 날아갔다고 보고서는 밝혔고, 또 중국이 잠수함 능력 증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현재 중국 잠수함 함대는 4개의 핵잠수함을 포함해 53개의 디젤엔진 공격 잠수함으로 이뤄져 있다고 전함.

바. 미·일 관계

- “오바마 대통령, 일본 요청받고 ‘센카쿠 영유권 중립’ 발언 안해”(5/5, 연합뉴스)
 -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영유권에 관해 중립을 취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공동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 영유권에 관해 미국은 중립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밝혔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영유권에 관한 미국의 견해를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이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센카쿠 열도에 대한 방위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 이번엔 세계 사학자들이 나섰다…시험대 오르는 ‘아베 담화’(5/6,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역사는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해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체면을 구기게 되었는데, 아베 총리의 ‘과거사 역주’에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역사학자들이 들고 일어섬.
 - 이는 단순히 역사학계를 넘어 아베 총리가 모처럼 주변국에 고개를 숙일 기회였던 지난달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조차 과거사를 외면한 데 대해 국제사회 전반의 기류가 비판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이번에 성명에 참여한 학자들의 규모와 면면으로 인해 그 상징성과 중량감이 커보임.

- 우선 참여한 숫자가 무려 187명인데다가, 모두 일본학과 일본문제를 연구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 시기의 역사적 사실관계에 정통한 인물들이고, 특히 이 중에는 세계 역사학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두(巨頭) 다수가 참여하였는데, 풀리처상을 수상한 허버트 빅스(미국 빙엄턴대학), 디어도어 쿡·하루코 다야쿱(미국 윌리엄 패터슨 대학), 존 다우어(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가 있음.
- ‘日 군위안부 과거사인정’ 촉구 역사학자성명 전문(5/6, 연합뉴스)
 - 저명 역사학자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라며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대니얼 올드리치 퍼듀대 정치학과 교수 제프리 알렉산더, 위스콘신-파크사이드대 교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역사학과 교수, 알렉시스 더튼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 노마 필드 시카고대 동아시아학과 명예교수,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 등 모두 187명이 서명함.
- 미 정부, 일 자위대에 오스프리 수송기 17대 판매(5/7,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일본 자위대에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대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자위대와 30억 달러(약 3조2천400억원) 규모의 V-22B 오스프리 수송기 판매 계약에 대한 국무부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발표함.
 - V-22B 오스프리는 미 해병대와 공군에서 사용 중인 수직이착륙기로 이번 계약에는 오스프리 17대 외에도 엔진, 적외선 레이더, 미사일 경보 시스템 등 연관 장비와 예비 부품 등이 포함됨.
 - DSCA는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일본은 항공수송기단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육상자위대의 인도적 재난 구호 역량이 상당히 증진될 것”이라며 “또 동맹인 일본과의 책임분담과 (미군과 자위대의) 상호운용성도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번 계약과 관련해 오스프리 수송기가 일본의 안전을 재확인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함.
 - 일본은 2019년 회계연도부터 오스프리 17대를 규슈(九州)의 사가(佐賀)공항에 배치할 계획임.

- 미군 오스프리 도쿄 배치 추진…일본 본토 첫 투입(5/9, 연합뉴스)
 - 미군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를 일본의 수도 도쿄(東京)에 배치하는 구상이 추진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CV22형 오스프리를 도쿄도 훗사(福生)시 일대에 걸쳐 있는 요코타(横田)기지에 배치하기로 방침을 굳힘.
 - 이르면 올해, 또는 2017년부터 투입을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10대 정도가 요코타 기지를 거점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에 미군 해병대의 MV22형 오스프리가 배치돼 있으며 보도대로라면 본토에 오스프리가 처음 배치되는 셈임.

- 일본 방위상 오키나와 지사 미군기지문제 면담…평행선(5/9, 연합뉴스)
 - 주일 미군기지의 이전 문제를 두고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沖繩)현 지사가 처음으로 면담(9일)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함.
 -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날 오키나와 현청에서 열린 면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오키나와 본섬 남쪽에 있는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같은 섬 북쪽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옮기는 것이 도심에 군 비행장이 있어서 생기는 위험을 줄이면서 미·일 동맹과 도발 억지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함.
 - 이에 오나가 지사는 기지를 오키나와 현 내부에서 옮기는 것에 반대하는 뜻에는 변화가 없으며 정부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재 진행 중인 이전 공사를 중단하라고 맞서는 등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키나와에서는 기지 내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의사를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직접 전달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 “일본인에게 오리건 스테이크를”(5/9,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리건 주 비버튼에 있는 나이키의 본사에서 “새로운 무역 협정은 우리의 노동자와 기업이 경쟁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연설하면서, “일본인들에게 오리건 주의 스테이크를 먹여보도록 하자”고 주장하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필요성을 강조함.
 -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본과 함께 호주와 싱가포르, 캐나다 같은 나라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불행하게도 현재 이 나라들에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품을 막도록 만들어진 불공평한 규정에 직면함을 의미한다”고 성토했던 뒤 “이 (무역)협정을 통해 바뀔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감.

사. 미·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아. 중·일 관계

- 아베 총리에 분노한 중국, 다시 ‘역사공세’ 강화 박차(5/4, 연합뉴스)
 - 중국 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역사 행보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강해지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다시 한번 ‘과거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는데,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침략 731부대 진열관’을 인용, 국가문물국이 최근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핑팡(平房)구역에 산재한 731부대 관련 13개 건물에 대한 보호·보수 사업을 승인했다고 보도함.
 - 중국은 이미 731부대와 관련된 27개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상태이며, 중국당국이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수할 731부대 관련 건축물은 이 부대가 주둔지 외곽에서 운영했던 세균실험실, 세균무기저장시설, 독가스 실험 및 저장시설, 수도·난방공급시설 등인데, ‘731부대 진열관’ 관계자는 “문물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발굴조사 등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함.
 -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리샤오제(勵小捷) 국가문물국장을 인용, 중국의 항일 유적은 전체의 42% 만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고 절반가량은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훼손된 상태라고 말하면서, 리 국장은 이에 따라 이들 항일 유적에 대한 보존 조치를 강화하고 오는 8월 말까지 국가 차원의 항일전쟁 주요 유적지 186개 중 113개에 대한 보수 작업을 완료하고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일, ‘이견 있어도 대화는 한다’는 분위기”(5/4,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과거사 문제로 곳곳에서 티격태격하고는 있지만,

필요하면 ‘대화는 한다’는 큰 흐름이 형성돼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복수의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최근 인도네시아 반등회의에서 성사된 중일 정상회담이 (최근 형성된 중일 간의) 큰 흐름에서 보자면 놀랄 일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분석함.

- ‘큰 흐름’이란 작년 11월 초 양제즈(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문제와 역사인식 등에 대한 4개 항에 합의 한 이후 양국 간에 형성된 일종의 ‘대화 흐름’을 뜻함.
 - 4개항 합의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지난 3월에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의 방일을 계기로 4년여 만에 양국 정부 당국 간 안보대화도 재개됨.
- 탕자쉬안 前 국무위원, 방중 일본 정치인에 ‘아베 연설에 사죄 노력’ 지적(5/5, 연합뉴스)
- 중일우호협회 회장인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자국을 방문한 일본 정치인에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사죄가 빠졌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도통신에 따르면 탕 전 국무위원은 전날 집권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 등 베이징을 방문한 일중우호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을 만나 아베 총리의 연설에 관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담화에 비교하면 들어 있지 않은 요소도 있다”고 말함.
 - 그는 아베 총리가 올해 여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관해 “역사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리가 어떤 담화를 내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고, 고무라 부총재는 “통절한 반성에 입각해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고 설명함.
- 중국, 도쿄재판 자료집 출간…대일 역사공세 강화(5/6, 연합뉴스)
-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일본 전범들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에 관한 방대한 증거와 문건을 정리한 자료집을 출간했는데, 이는 중국이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전 방위적인 ‘일제만행 알리기’의 일환으로서 대일 과거사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됨.

- 신화통신에 따르면 ‘원동(극동) 국제군사법정 증거 문헌 집대성’이란 제목이 붙은 이 자료집은 일본어판으로 된 50권과 중국어판으로 된 3권짜리 ‘색인·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상하이(上海) 교통대학 출판사와 도쿄재판 연구센터, 국가도서관 출판사가 공동으로 발간함.
 - 이 자료집에는 도쿄재판 과정에서 군사법원이 채택한 문서 3천915건(3만여쪽)과 당시 적십자회 회원들의 보고서, 관련 인물 일기, 편지, 개인자료 등이 담겨 있고, 이 가운데 미군이 확보했던 일본 정부의 기밀문서도 담겨 있음.
 - 통신은 도쿄재판이 열린 이래 처음으로 법원 증거물이 정리돼 출판된 것이라면서 매우 귀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 자료집의 출판은 만주사변, 노구교(盧溝橋) 사건, 난징(南京)대학살 등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죄행의 증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본 우익이 침략 범죄와 난징대학살 등 중국에 저지른 죄행을 부인하는 데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반박이 될 것”이라며 대일 역사공세의 취지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음.
- 中 장더장 상무위원장, “日전후 70년 담화, 중국과 전세계 납득시켜야”(5/6,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5일 일본 집권당 간부와 만난 자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여름에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에 대해 “중국과 세계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함.
 - 장 위원장 발언은 아베 총리의 담화에 ‘침략’, ‘사죄’ 등의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을 피력한 것으로 교도통신은 해석했는데, 이는 침략에 대한 사죄가 빠진 아베 총리의 지난달 말 미국 의회 연설을 지켜 본 중국 지도부가 아베 총리에게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됨.
 - 장 위원장은 또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언급, “일본도 협력해주면 좋겠다”며 일본의 참여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고무라 부총재는 의사결정 구조와 투명성 등을 둘러싼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일본이 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인식을 피력함.
 - 中, “식민역사 미화말라”...‘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성토(5/7, 연합뉴스)
 - 중국은 7일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된 일본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데 대해 “식민역사를 미화하지 말라”며 강하게 성토했는데,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정부가 오늘 일본의 관련 움직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또 “저는 세계유산 신청은 당연히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구축한다’는 유네스코와 세계유산협약의 취지 및 인류 공동의 가치관을 존중한다는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함.
- 중국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역사학자 187명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정면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의의 목소리’라고 평가함.

■ 中 위정성 주석, 日의원단에 “일본의 역사적 책임” 거론(5/8, 연합뉴스)

-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 일원인 위정성(俞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중국을 찾은 일본의원들에게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역사문제를 분명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함.
- 위 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 중진인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중의원 11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일본 의원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아시아 이웃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계속 평화발전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함.
- 또 “중국은 항상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인 대일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있다”면서 양국이 1972년 국교정상화 공동성명 등 중일 간 4개의 ‘정치문건’과 양국이 지난해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결한 양국 관계 처리 및 개선에 관한 4대 원칙 의 정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함.

■ 일본 해상자위대, 필리핀 해군과 남중국해서 연합훈련(5/10, 연합뉴스)

- 필리핀 언론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필리핀 해군은 12일 필리핀 마닐라만과 수빅만 사이 남중국해에서 돌발 상황에 대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연합 훈련을 할 계획임.
- 이 훈련에는 일본 호위함 2척, 필리핀 프리깃함 1척과 헬리콥터 등이 참가하는데, 이달 6일 일본 해상보안청과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필리핀 해안에서 해적 퇴치,

무기밀매·인신매매 단속 등을 위한 첫 연합 훈련을 벌임.

- 일본과 베트남은 오는 14일 베트남 해안에서 수색·구조 연합 훈련을 할 예정인데, 중국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갈등 중인 일본은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비롯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시도해 왔으며 이들 훈련 역시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임.

자. 중·러 관계

- 중국 “중·러, 2차대전서 참혹한 희생”...‘대일협공’ 예고(5/5, 연합뉴스)
 - 미일 동맹관계 격상 등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역사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린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짓거리와 기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다시 강한 비난을 쏟아냄.
 - 청궈핑(程國平)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손을 잡고 2차 대전의 승리 성과를 수호하고, 상호공영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외교부 주최 포럼에서 “신파시즘과 군국주의가 다시 머리를 들 조짐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으며, 특히 중·러 양국이 2차 대전에서 치른 희생과 ‘피로 맺어진’ 양국의 관계도 강조함.
 - 중국 고위 당국자가 러시아의 승전 열병식에 앞서 사실상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겨냥하는 동시에 중·러간 유대감을 강하게 부각한 것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이 다시 한번 일본에 대해 ‘협공 모드’를 연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 중국 군함, 러시아와 합동 훈련차 흑해 첫 진입(5/6, 연합뉴스)
 - 중국 해군 군함이 러시아와 합동 군사 훈련을 위해 지난 4일 처음으로 흑해에 진입했다고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와 홍콩 명보(明報) 등이 보도하였는데, 중국 해군 북해함대 제19기 호송편대의 054A형 호위함인 웨이팡(유<물수변+維>坊)함과 린이(臨沂)함이 4일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해 흑해로 진입했다고 언론은 전함.
 - 지난달 30일 경연성(耿雁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중순 지중해 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해군 수상함 9척이 참가하는 합동 군사 훈련 ‘해상연합-2015’을 시행한다고 밝혔고, 러시아 국방부도 이달 초 중국 해군 함대가 오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 이전에 흑해 노보로시스크 군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앤서니 뎡(黃東) 마카오국제군사학회 회장은 명보에 “중국이 파견한 군함은 일반 호위함으로 특별할 게 없다”며 “중국 군함의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흑해 진입이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군사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가 더 크다”고 분석함.

■ 시진핑 주석, 러시아와 역사공조...“역사 망각은 배반”(5/7,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대전 승전 70주년 열병식 참석을 앞둔 7일 “역사를 잊는 것은 배반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와의 역사 공조 강화 메시지를 피력했는데, 시 주석은 ‘역사를 깊이 새기고 미래로 향하자’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러 양국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인민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부인·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고치려는 시도 및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측을 겨냥함.
- 시 주석은 러시아의 저명 사학자인 클류체프스키의 "역사의 기억을 상실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사라질 것"이란 발언도 소개하고,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저지른 제2차대전을 ‘인류역사상 공전의 재난과 대참사를 초래한 전쟁’, ‘정의와 사악’, ‘광명과 암흑’, ‘자유와 노역’ 사이의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야만적인 침략자들’에 함께 맞서 싸웠다는 경험을 강조함.
- 시 주석은 “러시아는 유럽의 주요 전장으로서 2천700만명의 사상자를 초래했고 아시아의 주요 전장인 중국은 3천500만명의 민족적 희생을 치렀다”며 “중화민족과 러시아 민족은 모두 위대한 민족으로 우환과 재난을 함께 하며 피로써 전우애를 다졌다”고 의미를 부여함.

■ 푸틴 대통령-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전략적 상호협력 더욱 강화”(5/9,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유례없는 밀월관계를 재확인하며 상호 협력을

-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는데, 양국 기업인들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너지·인프라·금융 분야 등에 걸친 여러 협력 문서에 서명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조찬을 겸한 업무 회담을 한 뒤 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는데,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일방적으로 전세계적인 범위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구의 전략적 안정과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글로벌 MD 체제 구축에 나선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날림.
 - 두 정상은 또 양국이 각각 추진하는 지역 경제공동체 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에도 서명하였는데, 두 지역 경제공동체 간 협력을 위해 우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중부도시 카잔을 잇는 770km 길이의 고속철도 건설에 1조 루블(197억 달러·21조 4천670억 달러)을 공동 투자키로 합의했고, 중국은 고속철 건설에 약 3천억 루블 이상을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인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CNPC)은 ‘서부노선’ 가스관을 통한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기본조건들을 담은 협정에 서명하였는데, 서부 노선 사업은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의 알타이 지역에서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 지역으로 연결되는 약 2천700km의 ‘서부노선’ 가스관을 깔아 연 300억 큐빅미터(m³)의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공급하기위한 것임.
 - 이밖에 러시아 최대 상업은행 ‘스베르뱅크’와 중국개발은행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 시멘트회사인 유로시멘트에 대한 시설투자 차관을 9억6천만 달러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고, 중국 수출입은행이 러시아 케메로보주(州) 광산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러시아 브네슈예코늄뱅크에 39억 위안(약 6천300억원)의 차관을 제공하는 협정도 서명됨.
- 시진핑 주석, 러시아 승전 기념 군사 퍼레이드 높이 평가(5/9,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높이 평가했는데, 시 주석은 “오늘 붉은 광장의 승전 기념행사는 아주 성공적이었고, 모든 것이 성대하고 높은 수준에서 진행됐다”고 칭찬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함.
 - 그는 이어 “이 모든 것은 국가 발전에서 러시아 국민이 이룬 새로운 성과를 또 한 번 과시하고 전 세계에 러시아가 평화를 수호하려는 강건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하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중-러 관계 발전을 높은 수준에서 지속하고 각국이 양국 관계를 대외 정책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상대국의 아주 중요한 국가 이익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이에 메드베데프 총리는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한 중국군의 붉은 광장 행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중국군이 아주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은 것 같다”고 화답하고,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릴 2차 대전 승전 기념행사도 역시 성대하고 훌륭한 행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차. 일·러 관계

- 주미 러시아 대사, “역사수정주의 단호 대처”...아베에 경고(5/10, 연합뉴스)
 - 세르게이 키슬라크 주미 러시아대사가 지난 7일(현지시간) 2차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른바 ‘역사 수정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오후 워싱턴 D.C 소재 주미 러시아대사관에서 열린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러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오늘과 같은 자유를 구가하는 배경에는 전쟁기간 한 주에 평균 1만9천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큰 인명 손실을 본 러시아의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말함.
 - 특히 그는 “최근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수정주의 움직임이 있는데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부 국가들의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의 주체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의 무대에 올랐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잇단 ‘과거사 부정’ 행보를 경고한 것으로 풀이됨.
- 일본 언론, 러 승전행사서 ‘중러 밀착’에 주목(5/10,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러시아의 2차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부쩍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는 것에 주목했는데, 미국, 유럽, 일본 정상이 행사에 불참한 가운데 러시아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환대하고 정상회담까지 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로 생긴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은 것으로

해석함.

- 일본 언론은 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는 중국이 해양 진출을 확대하거나 역사문제를 주제로 자국을 견제할 가능성을 의식했는지 양국의 밀착에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교도통신은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승전 행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옆에 시진핑 주석이 자리해 몇 번이나 얘기를 나누며 친밀함을 과시했다고 보도함.
- NHK는 이번 행사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처음으로 참가한 사실을 거론하며 양국이 서로 굳건한 관계를 국내외에 과시했다고 평가했고, 아사히신문은 미국·유럽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 러시아가 중국과의 밀월을 택했다는 취지로 제목을 달았으며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와 싸운 나라들의 대표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표명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함.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정부 “北 주원문 씨 일방적 억류 유감…조속 석방하라”(5/4, 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적자인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불법입국’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4일 강한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음.
 -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주원문 씨를 억류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음.
 -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주원문 학생을 조속히 석방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음.
 - 또 “주원문 씨가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규범 및 관례에 따라 신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는 “주원문 씨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주 씨의 조속한 석방 및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비인권적 행위를 거듭할수록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한다”고 밝혔음.
 - 북한이 주장한 주 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보도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향후 주원문 씨가 우리 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 미국의 대북인권 제재 추진 비난…“망상”(5/5, 연합뉴스)
 - 북한은 5일 미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인권제재 추진에 대해 ‘개꿈 같은 망상’이라며 비난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벗어던진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면사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 국무부의 새 인권제재 검토 발표에 대해 ‘대북 인권책동’이 “노골적인 폭력양상으로 극도의 무분별 속에 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인권문제로 안팎에서 비난을 받는 미국이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미국의 주장은 “한낮의 개꿈과도 같은 망상”이라고 비난했음.
 - 논평은 “어떤 제제나 봉쇄도 스스로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사랑하고 빛내어 가는 우리 인민을 놀래울 수 없고 우리 제도를 허물 수 없다”면서 미국에 “상대를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음.
- 여성운동가들 ‘DMZ 도보 횡단’ 계획, 미국서 논란(5/6, 미국의소리)
- 세계 여성 비무장의 날인 오는 24일 걸어서 비무장지대를 횡단하겠다는 국제 여성 민간대표단의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음.
 - 북한은 이미 이 계획을 승인했고, 한국 통일부도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음.
 - 세계 여성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DMZ’ 즉, ‘여성들이 DMZ를 넘다’는 최종 승인을 받으면 평양에서 국제 여성토론회를 연 뒤 24일 걸어서 DMZ를 넘어 한국에 들어갈 예정임.
 - 여성운동가들은 또 군사 긴장의 완화를 통해 군사비를 남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환경보호로 돌리는 한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평화를 구축하는 모든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의 여러 한반도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이 이 계획에 대해 계속 우려를 제기하면서 미 언론을 통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음.
 - 유대계 인권단체인 사이먼 비젠탈센터의 아브라함 쿠퍼 부소장과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행사를 비판했음.
 - 이들은 평화행진이 역설적으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옹호할 수 있다며, 평화와 인권 위기를 누가 조성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김정은 정권이 진정으로 평화에 관심이 있다면 ‘선군정치’를 통해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공격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할 게 아니라 80-90살의 노령이 된 한국전쟁 국군포로를 석방해야 한다는 것임.
 - 여성들의 도보 횡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자국민을 압제하는 북한 정권과 맹목적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하지만 도보 횡단 행사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글로리아 스타이넴 씨는 지난

2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음.

- 압박을 통한 변화 시도는 오히려 변화의 벽이 되며, 고립과 규탄, 주민과 관리들 사이의 접촉 단절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임.
- 스타이넴 씨는 접촉의 단절은 더욱 단절을 가져오는 반면 잦은 접촉은 더욱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가 북한 정권을 정당화할 것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음.

■ 北 “이산가족 상봉 원하면 5·24조치 해제해야”…홍용표 장관 비난 강화 속 당국 대화 재개
여지 남겨(5/6, 서울신문)

- 북한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납북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비난전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면 5·24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해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여지도 남겨 뒀음.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5일 ‘누가 천륜을 어기고 있는가’라는 논평에서 홍 장관이 최근 납북자 가족을 만나 ‘북한이 천륜을 어겼다’고 말한 데 대해 “천륜에 대해 말한다면 바로 우리가 괴뢰당국에 해야 할 말”이라고 주장했다.
- 사이트는 “탈북자 대다수가 자기 의사에 반해 괴뢰에게 납치돼 강제로 남조선에 끌려간 사람들”이라며 “남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이 있다면 북남 사이의 일체 접촉과 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은 지난달 30일에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통해 “납북자 가족이라는 사람을 제 소굴로 끌어들이는 홍용표는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니 하며 감히 그 누가 천륜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어 댔다”고 지적했다.
- 홍 장관은 지난달 9일 납북자 가족과 만나 “북한이 납북자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천륜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北 “15명 처형은 반국가 범죄자 처벌”(5/7, YTN)

-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CNN 특파원이 북한 조평통, 즉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박영철 부원장과의 인터뷰 리포트를 방송했음.

- 박영철 부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도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존재를 부인하면서 다만 다른 나라처럼 범죄인을 수용하는 감옥이 있다고 말했다.
- 15명 처형설에 대해서도 반국가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처형을 지시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부인했음.
- CNN은 이에 앞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과 자진 입북한 뒤 체포된 미국 거주 한국인 대학생 인터뷰를 보도했고, 비무장지대 현장 방문 리포트를 보도했음.
- 인터뷰 자리에 외교부 간부가 아니라 대남 기구 간부가 나온 것도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 비난에 반박하기 위해 기획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다만 핵무기나 미사일 등을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희망할 때 제기하는 부분인 만큼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풀이됨.
-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때 CNN을 활용한 사례가 자주 있었음.
- 이번에도 인권 문제와 더불어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엿보이는 만큼 당분간 북한의 대미 정책 기조 변화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 北, 세월호 집회 진압 비판…인권공세 반격 시도(5/7, 뉴시스)

- 북한이 7일 세월호 사고 추모집회 당시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판했음.
-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공세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됨.
-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에 대한 괴뢰패당의 치 떨리는 탄압만행을 극악한 민주주의 교살행위로, 난폭한 인권유린범죄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규탄 단죄한다”고 밝혔다.
- 협회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괴뢰들이 남조선을 이런 인권의 가장 참혹한 폐허지대로 전락시키고 파쇼 총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나가는 주제에 인간쓰레기들을 밖에 끌고나가 북인권토론회니 뭐니 하는 광대극을 벌려놓고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서울에 끌어들이겠다고 분별없이 놀아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협회는 “괴뢰패당이 분노한 민심을 외면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에 계속 매달린다면 중국적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음.
 -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대한 반격 차원의 행위로 풀이됨.
 - 실제로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개선 압력에 맞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하반기 당 간부들에게 인권문제로 역공세를 취하라는 내용의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음.
- 北, 美현지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정치사기극”(5/7, 뉴시스)
 - 북한이 7일 미국 현지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반발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미국·일본·남조선괴뢰들이 미국땅에서 북조선자유주간·청문화·토론회 등 각종 반공화국 인권모략 놀음들을 집중적으로 벌였다”며 “이것은 인권을 구실로 우리를 어찌보려는 적들의 무모한 책동의 일환으로서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번에 인권모략의 총본산인 미국 땅에서 벌어진 각종 모략소동은 진리를 허위로 가려 보려는 파렴치한 정치사기극이며 음모와 날조로 세상 사람들을 기만해보려는 철면피한 광대극”이라고 꼬집었음.
 -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면서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터전인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미국과 추종세력의 책동은 우리 인민을 무섭게 격노시키고 있다”며 “공화국에 대한 압박분위기를 고취하면 할수록 판이 다 깨지고 우리의 강경대응 의지만 강화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北, 22호 관리소 탈주자 색출에 총력(5/8, 자유아시아방송)
 - 2012년 권력을 잡은 김정은이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은 회령 ‘22호 관리소’를 해체하는 것이었음.
 - 당시 현지 주민들은 ‘22호 관리소’의 해체에 대해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향한 젊은 지도자의 의지라고 높이 평가했음.
 - 하지만 함경북도 사법계통의 한 관계자는 “회령 ‘22호 관리소’는 관리소장의

운전수와 평양에서 온 여성정치범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여성수감자를 데리고 중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이 ‘22호 관리소’ 수감자의 탈출이라는 비밀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습하기 어려운 내부동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서둘러 관리소를 해체했다는 것임.
- 탈주한 운전수는 관리소장의 승용차는 검문하지 않는 경비초소의 약점을 이용해 여성수감자를 승용차에 감춘 다음 국경을 마주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교두까지 도주한 뒤 그곳에 차를 버리고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넜다고 소식통은 언급했음.
-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무역부문 관계자는 “‘22호 관리소’에서 탈출범이 발생한 것은 2012년 2월 중순경이었다”며 “탈주자들을 잡기 위해 중국사법기관들이 국가보위부와 협력해 체포 작전을 벌렸다”고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했음.
-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이들 ‘22호 관리소’의 탈주자들이 아직은 한국이나 제3국으로 피신하지 못하고 중국 동북지방을 떠돌고 있다는 보위부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소식통은 말했음.
- 소식통들은 “중국공안과 보위부 체포조가 수차례 그들이 머물던 장소로 추적되는 곳을 급습했지만 매번 허탕 쳤다”며 “그들이 중국에 있는 것이 밝혀진 이상 북한 보위부가 중국공안과 협조해 그들의 체포 작전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 10대 청소년 점쟁이 강력 단속(5/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10대 청소년들 속에서 급증하고 있는 점쟁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해외에 나온 한 대북 소식통은 “얼마 전 당에서 어린 자녀들을 내세워 미신행위를 하는 현상을 근절하라고 주민 강연회에서 공공연히 지시했다”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청소년 미신 행위가 건잡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소위 “신이 내렸다”고 자처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점괘를 봐주고 돈을 버는 현상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 부모들은 ‘백등록’이라고 알려진 책을 얻어다 10대의 자녀들에게 한 달간 공부시킨 다음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동네방네 퍼뜨린다는 것임.
- 그러면 사람들은 어린 점쟁이를 찾아가 사주팔자를 보고 액막이 하는 방법을 알아가는데, 어느 정도 들어맞으면 ‘유능한 점쟁이’로 소문난다는 것임.
- 이러한 10대 청소년 점쟁이들이 평양과 남포, 신의주 등 큰 도시에도 버젓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은 “머리가 좀 총명한 아이에게 한 달 동안 ‘백등록’을 공부시키면 웬만한 풍월을 읊는다”면서 “10대 점쟁이가 점을 봐주고 돈을 버는 행위가 하나의 상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2. 북한 인권

- 외교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6월 개소, 예정대로”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간 교환각서 문안에 합의 마쳐(5/5, 뉴데일리)
 -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유엔의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오는 6월 중 서울에서 문을 열게 됨.
 - 외교부는 지난 4일, “우리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측과 교환각서 문안에 합의를 마치고 현재 국내 설립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6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공식확인했음.
 -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됨.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열면,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북한 인권실태 조사, 납북자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부 매체들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외교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의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해명했음.
 - 외교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국내 활동을 하면서 국내법을 준수하는가 여부는 다른 국제기구 현장 사무소 협정에도 들어 있는 표준문안”이라고

반박했음.

- 4일 일부 매체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이 ‘현장 활동에서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반발했다”고 보도했음.

■ 카타르 사태,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고용주 대응 첫 사례(5/8, 미국의소리)

- 카타르의 유명 건설회사인 CDC(Construction Development Company)가 지난 4일자로 자사가 고용한 북한 건설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했음.
- CDC와 북한 당국자들 간 회의록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이 해고의 이유라고 밝혔음.
- CDC는 북한 측이 계속 근로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결과 최근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으며, 카타르 당국자들과의 사이에서도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회의에서 불만을 토로했음.
- 이번 사례는 해외에 파견된 자국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고용주 측이 대응한 첫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구기관들은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음.
-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최고 16시간씩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월 평균 120달러에 불과한 등 착취가 심각하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또 북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송환하겠다는 협박도 끊임없이 받는다고 지적했음.
- 이 같은 강제노동을 통해 북한 당국은 연간 12억에서 24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음.
-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음.
-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대로 일자리를 바꿀 수도 없는데다, 임금의 극히 일부분만 받는 등 극도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임.

-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노동기구 ILO의 노동규정 등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가 점점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제는 실제 상황이 어떤지 분명하게 밝힐 때가 됐다는 것임.
 -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해외 북한 노동자 대다수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방문을 허용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음.
- 일본 정부, 뉴욕서 북한인권 국제토론회 열어(5/8, 미국의소리)
-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인근 호텔에서 일본 총리실 산하 납치문제대책본부 주최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열렸음.
 -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유엔대표부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북한인권 문제,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상징성을 띠고 있음.
 -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음.
 - 야마타니 장관은 고령화하는 납북자 가족들과 구출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납북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라며, 북한이 지체 없이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솔직하게 통보하고 조속히 납북자들을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음.
 - 야마타니 장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일본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면서 대북 제재를 포함한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야마타니 장관은 북한 지도부가 인권 문제 해결을 향한 진지하고도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만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관한 일본과의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음.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와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지난 1950년 이후 저지른 외국인 납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할 때마다 납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투명한 방식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킹 특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북-일 간 양자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북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체계적인 인권 유린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주한인교회연합, 7월 워싱턴서 대규모 북한인권 행사(5/9, 미국의소리)

-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가 오는 7월 14일부터 이틀 간 워싱턴에서 다양한 북한인권 행사를 개최함.
- KCC의 김병주 간사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인권 상황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탈북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음.
- 행사 첫 날인 14일에는 백악관 앞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주민 해방을 위한 집회를 연 뒤 백악관을 따라 행진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할 예정임.
- 이어 15일에는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연방 하원의원 등 다수의 연사들을 초청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할 계획임.
- 이후 참석자들은 연방 상하원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북한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응답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
- KCC의 김병주 간사는 의원들을 만나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음.

3. 탈북자

- 북 보위부 ‘탈북자 체포조’ 중국서 활약(5/6,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한과 접경한 중국의 국경 도시를 기본 무대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상당수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단둥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호텔과 식당을 비롯한 상가 안에는 북한 요원으로 보이는 사복경찰들이 자주 눈에 띈다”며 “중국 공안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보위원 수십 명이 활동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 소식통은 북한 보위부가 이 같이 중국에 대거 들어온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면서 탈북자를 체포해오라는 김정은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국가보위부 소속 해외 반탐조직 요원 수십 명이 료녕성 단둥시와 길림성 연길시 등에 잠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내가 단둥 세관 앞에 가보니 차번호 19~20으로 시작되는 북한 승용차와 롱고방(롱벤)들이 주차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면서 “중국 공안들도 합부로 차 안을 뒤지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 차 번호 19와 20으로 시작되는 차량은 국가보위부와 지방 보위부 차량들로, 이들은 직접 차를 끌고 중국에 들어와 업무를 본다는 설명이다.
 - 승용차들이 신의주로 넘어갈 때는 중국 해관(세관)이나 변방부대 초소도 합부로 뒤 트렁크를 열어볼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보위부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 북한과 중국은 2003년에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범죄자가 상대국으로 도피할 경우, 수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상대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이 아니라 ‘불법입경자’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탈북자 체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 씨도 “헤산시와 맞닿은 장백시에 갔다가 음식점에서 보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꾸 미행해 급히 귀국했다”고 말했다.
 - 이 탈북자는 “북한이 요즘 한국인을 간첩으로 억류하고 내부 주민들에게 간첩소동을 벌이는 것을 보면 중앙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지시가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4. 이산가족

- 미 대통령에 이산가족상봉 청원(5/5,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하원에서 이산가족상봉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회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주관하는 국무부와 대통령을 대상으로 관심을 촉구하는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 이들은 지난 4일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공개했다.
 - 다음달 3일까지 10만 명이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청원에 참여한다면 백악관과 국무부의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을.
 - 이산가족의 2세와 3세의 청년모임인 ‘미국 이산가족’(Divided Family USA) 대표인 테레사 이 씨는 외조부께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한국을 거쳐 미국에 정착한 60여 년 동안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해온 사연을 최근에야 알게 됐으며 가족상봉을 위한 미국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게 됐다고 5일에 말했다.
 - 이 씨를 비롯한 시카고와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의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지역의 청년들은 지난해 말 미국 의회에서 이산가족 기록영화 상영회를 열어 의회 의원들과 국무부, 적십자 관계자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 이들은 최근 이산가족 1세대의 모임인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적십자에 접수하는 이산가족 상봉신청서 작성을 돕고, 각종 문서의 영어 번역과 통역을 맡고 있다.
 -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인터넷을 통해 알리는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5. 남북자

- 특이사항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7. 대북지원

- 미 NGO, 북한에 30만 달러 상당 씨앗 지원(5/5, 미국의소리)
 - 미국 동부 뉴저지 주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원 그린 코리아 무브먼트'(OGKM, 조국을 푸르게)가 최근 북한에 묘목용 씨앗 6t을 지원했음.
 - 이 단체의 이춘호 사무총장은 미화 30만 달러 상당의 씨앗 6t이 지난달 25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말했음.
 - 씨앗 6t은 10kg 플라스틱 통 600여 개에 담겨 중앙 양묘장과 지방 양묘장으로 보내졌다고 이춘호 사무총장은 밝혔음.
 -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삼림 녹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번에 지원할 묘목은 대부분 잣나무로, 중국 용정 목포장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함.
 - 이를 위해 나무 65억 그루를 심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65억 그루를 목표로 잡은 것은 총 200만 헥타르에 달하는 북한의 험벗은 산에 나무를 심으려면 헥타르 당 3천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임.
 - 북한은 지난 2013년 12월 이 단체에 수림화(산림녹화), 원림화(도시녹화)를 위한 65억 그루의 나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지원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전달했음.
 - 또 이 사업을 위해 평양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고 교통, 통신 시설 이용과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음.
- WFP, 4월 북 주민 80만 영양지원(5/7,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의 4월 대북 지원 식량규모는 전달보다 증가했지만,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진행 중인 지원 사업에서 계획한 지원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음.
 - 세계식량계획의 실케 버 아시아지역 대변인은 지난달 약 80만 명의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에 1천740여t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음.

- 한 달 전인 지난 3월 75만 7천여 명에게 1천650여t의 식품을 지원한 것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일 년 전 같은 기간인 2014년 4월 100만여 명에 약 2천 405t을 제공한 것보다는 줄었음.
 - 비 아시아지역 대변인은 오는 6월 말까지 영양상태가 안 좋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들에게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지원 규모를 축소할 상태라고 밝혔음.
 -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6월까지 북한 주민 약 18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올해 유엔의 식량구호기구가 지원한 북한 주민은 월 평균 72만여 명으로 당초 계획의 열 명 중 네 명꼴에만 식량을 제공하는데 그쳤음.
 - 비 대변인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억 3천700달러가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모금이 얼어붙은 상태여서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우려했음.
 - 세계식량계획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금한 액수는 5일 현재 7천500만 달러로 목표액 1억 3천 700만 달러의 약 55%만 확보한 상태임.
- 스위스, 북한에 분유 1천 지원…6월 말 도착 예정(5/7, 미국의소리)
-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처(SDC)가 548만 스위스 프랑, 미화 593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북한에 지원했음.
 - 스위스개발협력처의 토마스 피슬러 평양사무소장은 분유 1천50t을 지원했다며, 6월 말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스위스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은 이 분유로 ‘수퍼 시리얼’ 즉 ‘혼합영양강화식품’을 만들고 있음.
 - 이 ‘혼합영양강화식품’에는 ‘쌀-우유 혼합물’과 ‘곡물-우유 혼합물’, ‘옥수수-콩-우유 혼합물’ 등 세 종류가 있음.
 - 스위스개발협력처는 최근 공개한 ‘2015 대북 사업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부진과 신체,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음.
 - 또 영양 부족으로 인한 산모와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유로 가공된 영양강화식품은 영양 부족을 겪는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지원된다고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가 지원한 분유로 지난해 북한 주민 90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음.
 - 스위스가 지난 2009년 이래 북한에 지원한 분유는 미화 3천4백만 달러에 달함.
 - 스위스개발협력처는 스위스 당국이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분유’를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 분유로 만든 영양강화식품이 영양 부족을 겪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
 - 개발협력처는 올해 분유 외에도 북한 내 수도와 위생사업, 경사지 관리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가 올해 대북 지원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938만 스위스 프랑, 미화 1천만 달러에 이룸.
 - 이 같은 액수는 앞서 스위스개발협력처가 올해 예산으로 책정했던 810만 달러 보다 1백90만 달러 정도 늘어난 규모임.
- **미-북 교역 3월 급감…전액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5/7, 미국의소리)**
- 지난 3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7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음.
 - 지난 2월 5만 6천 달러의 교역 실적에 비하면 한 달 사이에 8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수치임.
 - 미-북 교역액은 지난 1월 14만 7천 달러를 기록한 뒤 올해 들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임.
 -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전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NAICS 990000)’, 즉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이었음.
 -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미-북 교역액은 21만 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인도적 지원을 위한 품목이 13만 8천 달러로 65%를 차지했음.
 - 나머지는 닭과 오리 등 도축된 가금류(NAICS 311615)가 5만 6천 달러, 설탕(NAICS 31131X)이 1만 6천 달러를 기록했음.
 -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수출통제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모든 품목은 건마다 심사를 하지만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음.
- FAO '북한 올해 쌀 180만 수확 전망'...작년 보다 10만 증가(5/8, 미국의소리)
 - 식량농업기구는 8일 발표한 '식량전망 보고서 (Food Outlook)'에서 북한이 올 가을 추수에 지난해 보다 10만 늘어난 180만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음.
 - 식량농업기구는 또 북한이 외국에서 쌀 10만을 수입해 2015-2016 양곡 연도 기간 190만의 쌀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음.
 - 또 북한 주민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8.3kg으로 추정했음.
 - 식량농업기구는 또 올해 북한의 강냉이(옥수수) 생산량이 지난해와 같은 260만t, 쌀과 밀을 제외한 잡곡은 270만t으로 각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음.
 - 아울러 북한이 강냉이 10만t을 수입해 내년까지 소비할 수 있는 양은 270만t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음.
 - 북한 주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할 쌀과 강냉이를 합하면 약 150kg으로, 이는 주민 한 사람이 하루 411g의 곡물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함.

8. 북한동향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美 국무부의 對北 새 인권제재 검토발표 관련 '인권을 구실로 공화국을 고립시키겠다고 떠드는 것은 한낱의 개꿈과도 같은 망상'이라며 '상대를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5.5,중앙통신/벗어던진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면사포)
-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의 '北인권법' 추진에 대해 '제도통일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흥계의 산물'이라며 '가뜩이나 암담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더욱 깊숙이 몰아넣는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비난(5.6,중앙통신·민주조선)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5.7), 경찰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시위대 진압 및 부상자 발생 관련 남한은 “최악의 인권불모지, 암흑사회”라고 비난하며 ‘反정부 투쟁’ 선동 (5.7,중앙방송·중앙통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